

구분	금액(조 원)				구분	금액(조 원)			
	2014	2016	2018	2019		2014	2016	2018	2019
국세 총액	199.3	235.7	285.9	286.0	지방세 총액	61.7	75.5	84.3	미 발 표
내국세	171.3	206.2	254.8	255.8	취득세(재산거래)	16.4	21.7	23.8	
소득세	53.3	68.5	84.5	83.6	재산세(재산보유)	8.8	9.9	11.5	
법인세	42.7	52.1	70.9	72.2	지방소득세	9.7	13.1	16.7	
부가가치세	57.1	61.8	70.0	70.8	지방소비세	5.8	6.4	7.4	
기타	18.1	23.8	29.4	29.2	자동차세(보유·주행)	6.9	7.6	7.8	
관세	8.7	8.0	8.8	7.9	지방교육세	5.4	6.3	6.5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5.3	15.3	14.6	기타	8.7	10.5	10.6	
교육세	4.6	4.9	5.1	5.1					
종합부동산세	1.3	1.3	1.9	2.7	시·도세 총계	46.1	56.1	62.4	

- ③(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 ④(X). 지방세 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 대통령령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와는 달리 기금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①(0).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②(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X).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④(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③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지방공사는 기업식 운영을 위하여 발생기준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중앙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위하여 사전 및 사후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 ③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는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 ④ 지방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는(당연직 이사 제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해설] ①(0).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한편,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②(X).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설립 전 협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해산 요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의 해임 요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③(0). 지방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0). 지방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는(당연직 이사 제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 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보기>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 고, 따라서 최적생산량은 시장 균형생산량보다 ㉡ 다.

- ㉠ ㉡
- ① 크 크
- ② 적 크
- ③ 적 적
- ④ 크 적

[해설] ④(0).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고, 따라서 최적생산량은 시장 균형생산량보다 적다. 따라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된다.

[정답] ④

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시·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으나 광역시 내에 위치한 군(郡)의 경우는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 ② 조정교부금은 무조건부 지원금인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 조정 방식으로는 일반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정재원인 시비 보조금이 있다.
- ④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정 보전 기능과 재정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①(X). 시·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으며, 광역시·도로부터 조정교부금도 받는다. 한편, 광역시 내에 위치한 군(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제 출제자는 문제의 지문을 ‘광역시 내에 위치한 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는 의미로 판단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②(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나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한다. 따라서 ②번 지문의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은 지문이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린 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의 대부분이 일반조정교부금(90%)이기 때문에 ②번 지문은 일반적으로는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0).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 조정 방식으로는 일반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② 해설 참조)과 특정재원인 시비 보조금이 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0).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정 보전 기능과 재정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② 해설 참조).

[정답] ①

8.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본금의 50%에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만 출자할 수 있다.
- ② 지방공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단의 경우 민간출자를 불허하므로 「상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 ③ 손익금 처리에 있어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나, 지방공사의 경우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 ④ 지방공사의 경우 직전 연도 자기자본금 10% 한도 내에서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나, 지방공단의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하다.

[해설] ①(△). 지방공사는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0).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지방공단의 경우 민간출자를 불허하며, 원칙적으로 「상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X). 지방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편, 지방공단은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 지방공사에 비해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④(0). 지방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단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하다.

[정답] ③

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BTO(Build-Transfer-Operate)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임차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②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③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④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해설] ①(X). ①번 지문은 BTL 개념을 변형하여 BTO 개념으로 혼동하게끔 만든 지문으로, BTO도 아니고 BTL도 아니다.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②(0). ②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③(X). ③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④(X). ④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10. 지방공기업의 요금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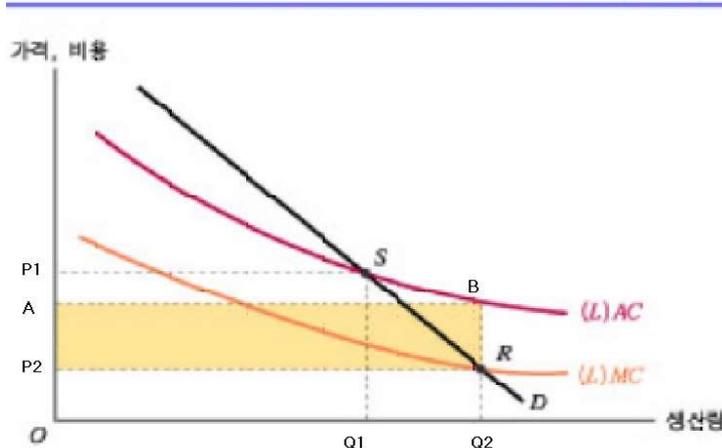
-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은 적자를 보게 된다.
- ② 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
- ③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이 평균비용 가격설정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공급량은 크게 나타난다.
- ④ 램지가격설정방식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①(O).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아래 그림에서 Q2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균비용 아래에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ABRP2 부분만큼 적자가 발생한다.

②(O). 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평균생산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추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산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

③(X).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이 평균비용 가격설정 방식을 채택할 경우(생산량은 Q1, 가격은 P1),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생산량은 Q2, 가격은 P2)에 비해 가격은 높아지고(P1 > P2), 공급량은 적게 나타난다(Q1 < Q2).

규모의 경제 하에서 가격 설정



④(O). 램지가격설정방식은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의 격차 비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 비율과 같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램지가격설정방식은 효율성 측면을 중시하고 공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③

11.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될 때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 ② 조세부과계획 발표시점의 토지 구입자에게 모두 부담이 귀착된다.
- ③ 토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 ④ 토지 임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해설] ①(O). 조세의 자본화(tax capitalization)란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완전 비탄력적) 내구성을 가진 경우, 조세 부과시 조세부담이 자본화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토지 가격이 미래에 발생될 조세부담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그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①

12. 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새뮤얼슨모형(Samuelson model)
- ② 린달모형(Lindahl model)
- ③ 티부모형(Tiebout model)
- ④ 니스카넨모형(Niskanen model)

[해설] ①(X). 새뮤얼슨모형(Samuelson model)은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어렵다고 본다.

②(X). 린달모형(Lindahl model)은 각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면,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 를 통해 공공재의 적정 생산수준과 비용 부담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O). 티부모형(Tiebout model)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주민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세금’ 패키지를 산출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게 되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방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촉발한다는 논리이다. 즉, 순수공공재와는 달리 지방공공재의 경우는 분권화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④(X). 니스카넨모형(Niskanen model)은 관료의 예산극대화 추구 성향으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공급이 적정 수준보다 과다 생산·공급된다고 보았다.

[정답] ③

13. 지방세인 동시에 목적세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보기>	
가. 부당이득세 다. 종합부동산세 마. 지역자원시설세 스. 재산세	나. 개별소비세 르. 농어촌특별세 바. 지방교육세 오. 담배소비세

- ① 다, 마
- ② 마, 바
- ③ 바, 스
- ④ 바, 오

[해설] ②(O). 지방세의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구 분	도 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특별시의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광역시의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 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②

14. 지방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다.
- ②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다.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 ①(0).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용도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예를 들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심사 제외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③(X).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X).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①

15.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나타나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기술은 기술진보가 늦어 항상 임금수준이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공공 지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 ②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 ③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④ 지방정부의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관료들의 예산팽창 욕구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된다.

[해설] ②(0).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된 지원금이 처음 이전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Money sticks where it hits)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지원금의 증가가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후생 증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만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정답] ②

16.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
- ②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분석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의 운영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및 상태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해설] ①②③(0).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 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④(X). ④는 지방재정분석 제도의 목적에 해당한다. 지방재정분석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정답] ④

17.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로 인해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 ② 임기 내에 사업완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단체장의 성급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실패를 초래한다.
- ③ 비대칭적 정보와 지방의원 포획의 문제로서 지방관료들이 지방의원들을 포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④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참여와 지역이기주의가 예산편성 및 운용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해설] ④(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06년 지방재정법에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었고, 2011년에 의무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2018년에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낮은 주민 참여와 다수 무관심으로 인해 주민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과의 소통·토론·숙의 과정의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과 기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④번 지문에서 과도한 참여로 인한 예산편성 및 운용의 파행의 초래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지역 및 특정 이해주체의 이해사업과 나눠먹기식 예산 운영, 기존 사업의 참여예산 포장, 과다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답] ④

18. 특별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보기>

ㄱ.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시, 중앙부처 장관에게 신청할 경우에만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ㄴ.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ㄷ.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ㄹ.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ㄷ, ㄹ

[해설] ㄱ.(X).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ㄴ.(X).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ㄷ.(O).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 ㄹ.(O).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일괄적으로 교부한다. 한편,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19. 지방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매출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일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후년에 지급을 약속하고 지방채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 ② 모집공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 ③ 교부공채는 지방정부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민 또는 법인에게 강제로 참가·소화시키는 방식이다.
- ④ 우리나라의 지방채발행에서 모집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해설] ①(X).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일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후년에 지급을 약속하고 지방채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교부공채이다.

②(O). 모집공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③(X). 지방정부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민 또는 법인에게 강제로 참가·소화시키는 방식은 매출공채이다.

④(X). 우리나라의 지방채발행에서 매출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집공채보다 높다.

<지방채 현황(2018년 결산 기준)>

종류		금액	비중	
증서차입(차입금)		5조 1,303억 원	21.4%	
증권발행(지방채증권)	모집공채	2조 9,048억 원	11.8%	
	매출공채	도시철도채권	5조 8,975억 원	24.1%
		지역개발채권	10조 4,474억 원	42.7%
총액		24조 4,800억 원	100%	

[정답] ②

20.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지 않는 세목은?

2018 서울7급 지방재정론

- ① 취득세
- ② 지방소득세
- ③ 등록분 등록면허세
- ④ 담배소비세

[해설] ②(X).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p>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일부 재산세액 제외)의 납세의무자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학교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정답] ②